

---

---

# 이슈브리프

2016. 12. 8

---

---

- Ⅰ. 중국의 韓流제재 본격화 동향 및 시사점 / 1
- Ⅱ.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내용 및 시사점 / 8
- Ⅲ.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13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 중국의 韓流제재 본격화 동향 및 시사점

지난 8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등 외교적 갈등으로 중국의 일시적 보복으로 여겨졌던 ‘금한령(禁韓令)’이 중국의 ‘문화보호주의’ 발동으로 ‘한한령(限韓令)’으로 보다 구체화되면서 한류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 다수의 중국매체들은 금한령 강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족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중국연예인의 국민적 영향력과 호소력 확대 ▲화류(華流)가 한류(韓流)를 대체해 중화문화권 주도 등을 강조. 특히 중국의 ‘중화문에 부흥’ 선언으로 한류제재의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산업은 새로운 출구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임.

## 1. 중국, 韓流 막을 장벽 건설 중

○ 7월, 한국의 사드(THAAD) 체계 배치 결정 후, 중국의 한류제재 시작

- 한국 방송콘텐츠의 신규 승인 중단, 방송제작 협력을 위한 논의 무산 등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 가중
- 중국 광전총국(한국의 방송통신위格), ▲한국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스타 중국 예능프로그램 출연금지 결정, “신규 합작프로그램은 더 이상 승인이 나지 않고, 재승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모두 일시보류상태” 선언
- 대만 연합신문망(7.30), “중국 광전총국이 한국에 대한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중국당국이 8월부터 한국연예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예능·드라마) 출연을 금지시켰다고 보도

- 최근까지 '2000년대 중반부터 혐한(嫌韓)기류는 조금씩 있어왔고, 이번 사드배치 결정으로 혐한을 언급해왔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
- 실제로 콘텐츠 업계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지만, 중국정부에서 대놓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
- 그러나 중국 콘텐츠업계의 '전략적 모호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 중국업체들이 (중국당국의 모호한 보복조치에 편승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계약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점점 증하기 시작
- 당분간 중국 특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 禁韓令[한류 콘텐츠 금지]과 限韓令[한류 제한] 구체화

- 11월 중국정부 '금한령' 공식 부인, 그러나 내재되어 있는 현실을 암시
  - 中외교부 대변인 경쑹(耿爽) 정례브리핑(11.21), '금한령'을 들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한·중 양국간 인문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양국간 인문교류는 민의의 기초 아래서 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인들은 사드 배치에 불만을 표명했고 유관부문도 이미 이런 (국민)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 이러한 모호한 발언을 통해,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일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

## ○ 韓流 전면봉쇄 나선 중국

- 중국 예능분야에서도 한국 연예인이나 감독이 참여하거나 한국측이 투자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만 진행하고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중국판 ‘아빠 어디가’ 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가수 황치열이 빠진 것도 대표적인 사례
- 장쑤(江蘇)TV, 최근 한국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상품광고를 방영하지 않겠다고 발표
- ‘제2의 대장금 열풍’을 기대하며 제작한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사임당, 빛의 일기’도 중국 방영이 요원한 실정
- ※ 5월 촬영을 마친 ‘사임당’은 한·중 동시상영을 계획했지만, 중국측 상영이 늦어지면서 SBS가 2017년 1월 한국에서 우선 방영 예정
- 한국연예인이 출연한 TV드라마와 웹드라마 10여개가 상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
- 일부 예능프로그램들은 한국연예인이 출연한 화면을 편집해 삭제하거나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限韓令에 부응

## ○ 다수의 중국매체들은 禁韓令 강화를 기정사실화

- 관변매체 환구시보, “중국의 금한령이 발효되면 한국은 가장 큰 한류 시장을 잃게 되며 한국정부의 문화정책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위협성 보도

- 한국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강화를 통해 금한령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 상황
  -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스타들이 단 한명도 없어,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은 全無
  - 중국 TV나 신문에서도 한국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영화 소개가 거의  
사라진 상황
- 중국매체 위협성 보도 점입가경
  - “중국 연예산업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된다는 의미”
  - “금한령의 전면실시로 중국 TV에서 한국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질 것”
  - 한국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뿐만 아니라 콘서트, 온라인 동영상 등도 모두  
금지

○ 중국매체가 禁韓令을 행하는 다섯가지 이유

- 민족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 중국연예인의 국민적 영향력과 호소력 확대
- 남성이 지나치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비정상적인 현상 바로잡기
- 화류(華流)가 한류(韓流)를 대체해 중화문화권 주도
- 분별없는(지나치게 높은) 출연료 지급 행태 경고

○ 중국의 ‘문예굴기(文藝屈起)’에 따라 禁韓令 공식화 여부 촉각

- 시진핑(習近平), ‘중화문예 부흥’ 선언
- 11.30일 시진핑 주석,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작가협회 제9차 전국대표대회 참석, ‘중화문화 자부심’, ‘중국특색 작품 창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발양’ 등 강조
- 5년마다 한차례씩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 전역의 문학·연극·미술·음악·영화 등 문예전문가 3,300여명이 대거 참석, 이 자리에는 직간접적인 한류 규제에 따라 기회를 맞은 중국의 영화·드라마 기획 및 제작자들도 다수 참여
-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의 기초를 自國문화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외국 문화예술에 대한 배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

### 3. 시사점

○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재는 ‘사드 보복’의 그림자로 해석

- 사드배치 관련 중국언론의 對韓제재 언급에는 한국경제의 중요 영역에 대한 필요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는 폭언과 위협을 동반

-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입 통제, 중국인의 한국관광 제한, 한류 연예 스타들은 사드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위협성 보도
- 인터넷 조사에서도 중국인민들의 80%는 한국이 사드 배치時 중국은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 한국 화장품 불매운동 등 이 모든 것은 중국인들이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

○ 중국, 명분과 실리 모두 쟁취하는 一石二鳥 효과 기대

- 중국 국내회의를 포함 국제회의에서도 모든 귀결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기-승-전-사드’로 마무리
- 제4회 韓中 공공외교포럼(11.28)에서 첸홍산(錢洪山) 중국외교부 부장 조리,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분야별 교류가 일정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 사드 명분을 통한 ‘한국 길들이기’에 한류산업을 무기로 활용, 중국 정부의 몽니가 현실화
- 사드 보복은 현재진행형, 중국정부의 ‘한국기업 트집잡기’는 업종을 바꿔가며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 및 문화보호주의 發現

○ 중국의 문화애국주의

- 시진핑, ㉠문화적 자신감을 견지하고, 문예를 통해 민족정신을 진작시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해 낙관적 진취적인 작품으로 인민을 찬양하며, ㉢용감한 혁신·창조를 통해 우수한 예술로 문화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예술적 이상을 가지고 품위있는 문예로 사회기풍을 주도할 것 등 4개 사항을 당부
- 한국 백만 촛불집회의 민주문화국가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방어 성격의 개연성

○ 이에 따라, 한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출구 모색이 시급

- 중국시장에 편중된 한국의 문화산업구조의 변화 모색
- 관련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나아가 한류산업의 혁신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동남아와 중동 등 다른 지역과 국가와의 문화 교류 다변화가 필요

[ 작성: 윤승현 연구위원 ☎ 02-369-7949 ]



## II. '유엔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내용 및 시사점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제재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11.30).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4번의 대북제재 결의(1718호, 1874호, 2094호, 2270호)에 이은 5번째 대북제재 결의(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는 1695호, 2087호)로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경제적·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다양한 방책이 총망라된 강도높은 포괄적 제재임. 향후 同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약화된 한중관계를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특히 필요하며,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1. 결의안 2321호의 주요 내용

-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 제한
  - 수출 상한제 도입 및 수입국은 보고 의무화
    - 내년부터 연간 석탄 수출액 총 4억 87만달러(약 4,700억원), 수출량 총 750만톤의 상한선을 설정, 규제
      - ※ 수출액, 수출량 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전 회원국에 통보되고, 특히 95% 시점에서는 수입중단 지시
- 핵과 미사일 무관해도 대북 금융지원 금지
  - 민생 예외 조항 축소 및 대량살상무기(WMD) 연관성 조건 삭제

- 2270호에서 민생 목적 예외를 인정했던 ‘대북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규정 등이 “예외없이 적용”으로 변경

※ 다만, 철·철광석 수출은 이번에도 민생 목적 예외 인정

- 금융지원 금지 규정은 핵·미사일 등 WMD와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 것을 ‘연관성 조건’을 아예 삭제해 제재를 강화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와 계좌 개설 등의 활동도 금지

### ○ 북한 외교활동 제한

- 해외공관원 1명당 1계좌만 허용 등 해외공관의 활동 제한

- 북한의 해외공관 규모를 감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이 신규 공관을 내거나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데 제약이 있을 것임
- 북한 공관원 1명당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으로 공관원에 의한 밀수 등 불법활동 방지
-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금지

### <표> 북핵실험 관련 UN 대북제재결의 일지

계기	결의안	주요 내용
1차 핵실험	1718호 (06.10.14)	무기 관련 품목 및 사치품 공급 판매 금지 대북제재위원회 구성
2차 핵실험	1874호 (09.06.12)	무기 관련 물자 수출금지, 금융 제재 강화 의심 화물·선박 검색 강화
3차 핵실험	2094호 (13.01.23)	금수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개인·단체 제재, 의심 선박·항공기의 검색·차단, 北 외교관의 위법행위 감시 강화
4차 핵실험	2270호 (16.03.02)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 금지(민생목적 예외)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도 금지 핵·미사일 관련 기술협력 금지 WMD 관련 제3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와 계좌 폐쇄
5차 핵실험	2321호 (16.11.30)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연간 수출액 4억달러)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금지 WMD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와 계좌 폐쇄

## 2. 평가

### ○ 북핵 현금줄 차단 고강도 압박책

- 연 8억달러 수출 제동, 북한 수출 23% 감소 전망
  -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북·중 무역으로, 지난해 석탄수출은 북한의 對중국 수출총액의 38%인 10억 5천만 달러 차지(1,960만톤)
  - 2015년의 10억 5천만달러分이 약 4억달러로 줄어들거나 1,960만톤의 수출 물량이 750만톤으로 감소됨으로써, 연간 7억달러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은, 동, 니켈 등 수출금지광물로 추가되었고, 대형 조형물의 수출까지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고강도 압박의 성격
- WMD 및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한 원천적 차단
  - 북한 핵·미사일뿐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까지 기술협력 금지를 통해 WMD 관련 기술 습득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화물 검색 및 차단 등 원천봉쇄)
  - 재래식 무기 관련 二重용도 품목의 이전 등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재래식 무기 증강도 억제

### ○ 對北 국제공조 확인

-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제재로 일정의 실효성 확보
  -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에 이은 5차 핵실험(2016.9.9)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넘어 본격적인 ‘핵보유국’ 진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안 마련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

- 특히 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고집해 온 중국의 공조를 확보해낸 것은 진전된 성과
- ※ 지난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회담(뉴욕)을 갖고, 북한 핵실험 관련 유엔안보리 협력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합의

### 3. 정책적 제언

#### ○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대비

- 美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 6차 핵실험 등 군사도발 대비 필요
-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노리는 북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전략적 도발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며 미 차기정부의 국정순위에서 높은 순서로 끌어올리려는 의도 존재
- 제재 불만에 대한 북한의 對美 메시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미국의 경고성 對北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핵실험까지 고려할 것

#### ○ 불편한 한중관계 회복 및 북핵 공조 강화

- 걸끄러운 한중관계 회복 우선
- 최근 중국은 THAAD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의 강경대응 등에 대한 반대표시로 비자발급 문제나 한국기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부터 한류스타의 활동을 막는 금한령(禁韓令)까지 다양한 보복조치를 현실화

- 북한의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불편한 한중관계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번 2321호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재하더라도 석탄 수출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북·중간에는 항상 광범위한 밀무역이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협조 없이는 제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작성: 최원용 연구위원 ☎ 02-369-7949 ]

### Ⅲ.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불확실한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주택거래감소와 매매가격하락, 역전세난과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금융규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함.

#### 1. 주택시장 동향

-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거래량, 공급량, 전세가율, 주택담보대출 등이 사상 최대수준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음
  - 국내외의 좋지 않은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만 고공행진을 지속해 옴
    - 서울의 경우 올해 10월 중 아파트 거래량이 약 1,700만건으로 지난해 同月(1,153건)보다 15% 가까이 증가된 규모
    - 주택 공급량 역시 사상 최대였던 2015년도(515만호) 수준과 유사하여 과거 물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매매가격의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됨
  -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평균 75.4%(2016.11月)로 사상 최대
    - 서울의 경우, 전세 실거래가구 중 31%가 전세가율 80%를 상회(2016.8月)

-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471.3조원으로 史上 최대치였으나,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였음
-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강세 역시 「11.3 실수요 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를 계기로 약세로 전환
  - 특히 분양권 거래 가수요 감소, 청약통장 불법거래 급감 등에 따른 청약률 저조 등으로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강남 4구의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추세
  - 1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이 당초 24,642가구에서 18,453가구로 6,189가구가 감소
  - 지방 역시 청약률 저조로 미분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 2017년 주택시장 전망

-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저성장세의 지속, 저금리구조의 향방 및 국내의大選 등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 현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여건이 2017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나, 하반기부터는 매매가격 하락세 및 거래량 위축현상이 나타날 것임
    - 2015~2016년 과잉 공급된 주택(아파트) 물량의 본격적인 입주가 집중
    -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유럽발 경제위기, 북핵위기, 대선 등이 주택경기를

포함한 경제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 가격 약세 및 신규물량 공급 증가로 기존주택의 거래량은 감소 예상
- 주택공급은 10~20%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누적물량 증가 부담,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 예상
  - 인허가 55만호(공공 7만호, 민간 48만호), 착공 56만호, 분양 38만호 수준 전망(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공급물량 증가는 전세가 상승압력 둔화로 임차시장의 가격안정화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 역전세난(강통전세문제) 우려도 있음

### 3. 정책적 시사점

- 2017년도 주택시장의 주요 영향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공급·입주량 및 정치적 요인(大選) 등 6가지로 파악(주택산업연구원 외)
  - 그 중 가계부채대책 및 대출규제와 금리 등 주택금융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내년도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기준금리의 연내 인상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내 금리상승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늦추는 등 조절 필요
  - 금리 인상時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11.3 대책 발표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활성화에서 안정화로 상당부분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문제의 해소와 저성장 탈출, 양극화 해소, 주택시장 안정화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대선 전후에도 이러한 주택정책의 기조 유지 필요
  - 다만 주택거래의 감소와 역전세난, 미분양미입주 증가 및 매매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우려도 적지 않으므로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의 속도조절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7월末로 예정된 LTV·DTI 규제완화 시한 종료, 연말이 시한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종료 등의 규제가 대선시기와 맞물려 시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의 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철저한 공급관리 및 합리적인 주택금융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 택지조성 및 인허가 단계부터 수요 및 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지 및 인허가 물량 조정
  -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 우려 문제는 임대사업자 육성, 수분양자의 주거이동 지원, 금융지원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필요
  -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미시적 시장분석을 통해 불확실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작성: 이종인 연구위원 ☎ 02-2070-3325 ]